

## 국무조정실

우 110-760 /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 02)3703-3926 / 전송 02)732-7155  
규제개혁1심의관실 과 장 임종순 서기관 정현용

문서번호 국무규제05090- 92

시행일자 2001.1.26 ( )

(경 유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 규제개혁담당관

보존기간	1	실 장	국무총리
공개여부	공개	하	정현용
조 정 관			
심 의 관			
과 장	임종순		
기 안	정현용		
심 사 자		심 사 일	협조

제 목 「2001년도 정부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」 시달(국무총리 지시 2001- 4 호)

금년도에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할 「2001년도 정부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」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동 추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◇ 다 음 ◇

#### 1. 지식정보화 사회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

- 붙임자료에 제시된 규개위 상정일자(본회의기준)에 따라 추진하되, 위원회 상정 최소 1개월 전에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할 것
- 전문적인 연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외부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과제에 대하여는 2.10(토)까지 용역과제명, 용역기관, 최종보고서 접수 시한 등을 명시한 용역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(※2월중으로 용역의뢰 완료).

#### 2.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

- 건축, 환경 등 5개 중점분야의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정비작업(국무조정실 주관)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되, 관련부처는 작업반 구성 및 세부 분야별 정비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(관련부처 : 해양수산부, 건설교통부, 산업자원부, 환경부, 문화관광부)

- 5개 중점분야 관련부처 이외의 전 부처는 국무조정실이 1/4분기중 시달예정인 정비지침 및 추진일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정비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추진할 것(※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예정)

### 3. 신설강화규제의 부처 자체심사 강화

-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강화방침에 따라 각 부처의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규제영향분석을 더욱 내실화할 것
  - 규제신설시에는 기존규제 또는 유사행정규제의 폐지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자체 규제영향분석결과를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검토토록 의뢰할 것
  -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설강화규제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토록하고, 설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할 것

### 4. 부처별 특정과제의 정비

- 불임자료에 제시된 규개위 상정일자(본회의기준)에 따라 추진하되, 위원회 상정 최소 1개월 전에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할 것
- 비용역과제는 상반기중 위원회에 상정완료토록 하고, 용역과제에 대하여도 11월 말까지 위원회 상정을 완료토록 할 것(※외부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과제에 대하여는 2.10(토)까지 용역과제명, 용역기관, 최종보고서 접수 시한 등을 명시한 용역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중으로 용역의뢰를 완료할 것)

참 부 : 2001년도 정부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. 끝.

## 국 무 총 리

가 25~26, 29~31, 41~86  
수 신 처 : ~~과 15~16, 19~20, 31~47, 52~55, 57~67~~

國務總理 指示  
第2001 - 4 號

< 2001年度 >  
政府 規制改革 業務 推進計劃

2001.1

規制改革委員會

# 目 次

I . 推進經過 .....	1
II . 2000年度 規制改革 推進実績 .....	2
III . 2001年度 規制改革 推進計画 .....	5
1. 지식정보화사회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상반기중 완료	
2. 하위규정 · 유사행정규제의 집중정비	
3. 신설 · 강화규제심사의 강화	
4.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강화	
5. 규제개혁 성과의 평가 · 홍보강화 및 지원 확대	
<参考1> 2001년도 추진대상 특정과제 .....	15
<参考2> 2001년도 지식정보화관련 추진대상과제 .....	17

## I. 推進經過

- 「국민의 정부」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「기업하기 좋은 나라, 생활하기 편한 나라」를 목표로 행정규제의 전면정비작업에 착수
  - '98년 한해동안 전체 기존규제 총 11,125건 중 절반수준인 5,430건을 폐지하고, 2,411건을 개선하는 등 7,841건(70.5%)을 정비하였으며, '99년에도 잔존규제 5,695건 중 1,073건(15%)을 추가로 정비
  - 경제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규제, 다수부처의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점과제에 대한 개혁작업도 병행하여 추진
- ※ 지난 2년간 총 364개의 규제개혁관련 법률과 1,242개의 하위법령 (시행령: 309개, 시행규칙: 404개, 고시·훈령 등: 529개) 정비를 완료
- 규제개혁 추진 3차년도인 2000년도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는 「신지식·신기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」을 목표로 규제의 품질제고 및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주력
  -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제관련 규제를 더욱 과감히 정비하고, 보건·위생, 환경, 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그 수단과 방법의 합리화에 중점
  -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
  -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, 각종 협회·단체 등 준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일제정비작업도 아울러 추진

## II. 2000年度 規制改革 推進実績

### 1. 주요 정책분야별 중점규제개혁과제를 선정, 핵심당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

- ☐ 다수 부처의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6개 중점과제(일부완료과제 2개 포함)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

※ 1998년 37개, 1999년 33개의 중점과제를 정비

### 2.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

- ☐ 지침, 내규 등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와 공단, 협회 등 정부 산하기관의 각종 규정에 의한 유사행정규제에 대해 일제정비

○ 총 4,208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이중 2,405건(57.2%)을 정비

구 분	규제수	정비실적		
		소계	개선	폐지
하 위 규 정	2,533	1,217	668	549
유사행정규제	1,675	1,188	261	927
계	4,208	2,405	929	1,476

### 3.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21세기 정보강국 건설의 토대 마련

- ☐ 전문가용역 및 경제5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총 8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「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(2000.9.27)」을 마련하고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,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

- 2000년 중에 추진기로 한 26개 과제(일부 개선과제 9개 포함)에 대한 정비작업을 계획대로 모두 완료

(예)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,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방안 마련,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도입 등

#### 4.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

- 경제5단체에서 건의한 핵심규제개혁과제 중 규제관련 22개 과제를 검토,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

(예) 지주회사 요건 완화,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의 처분제한 폐지, 남북교역시 반출입승인권의 민간이양 등

※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'SOC 민자사업 대출자산의 BIS 자기 자본비율 적용규제완화' 등 4개 과제는 미수용

#### 5. 「현장중심 규제개혁」으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

- 시·도, 시·군·구 등 5개 단체유형별 규제개혁모델을 개발·보급하여, 주민과 접촉이 잦은 지방행정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
  - 동 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 평균 총 규제사무 346건의 62%(213건)를 정비목표로 설정하고 2000.12말까지 목표대비 95%(단체평균 203건)의 정비를 완료
  -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간 공동회의 개최로 지자체의 규제심의 역량 제고(12월)

- ☐ 규제개혁 종합점검반을 설치하여 2회(4월, 11월)에 걸쳐 중앙 행정기관, 지자체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
- 법령미근거 규제등 135건을 정비하고 여타 기관에 통보 하여 유사사례를 자체 정비토록 조치
-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전국적인 공통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한 교차점검 실시(11월)

## 6. 내실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심사

- ☐ 지난 1년간 총 138차례에 걸쳐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, 총659건의 안건을 심사(의결안건 593건, 보고안건 66건)

구 분		개최횟수	심사안건수			비 고
			소 계	의결안건	보고안건	
본 회 의		22	107	81	26	
분 과 위	경 제 1	41	197	188	9	
	행정사회	40	204	184	20	
	경 제 2	35	151	140	11	
총 계		138	659	593	66	

- ☐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실적

구 분	법령수	심사대상 규제 수	심사 결과(%)		
			개선권고	철회권고	원안수용
경제1분과	195	424	108(25.5)	35(8.3)	281(66.2)
행정사회분과	122	338	109(32.2)	37(11.0)	192(56.8)
경제2분과	89	340	89(26.2)	22(6.5)	229(67.4)
총 계	406	1,102	306(27.8)	94(8.5)	702(63.7)



### Ⅲ. 2001年度 規制改革 推進計劃

#### <重點推進方向>

- ☐ 지식정보화 사회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의 마련작업을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
- ☐ 일선기관, 정부관련 법인·단체 등의 국민생활관련 규제를 집중 정비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
- ☐ 규제총량을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더욱 강화
- ☐ 기업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
- ☐ 이해관계자·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 및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

## 1. 知識情報化 社會 및 電子政府 具現을 위한 規制改革의 上半期中 完了

□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81개 규제개혁과제 중 금년에 추진기로 한 64개 과제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착

-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
  -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 등 4개 분야 25개 과제
-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
  -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3개 분야 18개 과제
-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
  -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등 2개 분야 15개 과제
-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한 제도정비
  -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등 6개 과제

### □ 추진방안 및 일정

- 법률 제·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하반기중 관련법률을 제·개정
  - 기타 시행령·규칙 또는 고시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1/4분기 중 추진을 완료
- ※ 4대부문 개혁을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겨 조정
-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1~2월중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(※ 환경, 건축, 생명공학 분야 등)

## 2. 下位規定・類似行政規制의 集中整備

- 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, 환경 등 5개의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집중 개선
  - 작업반은 소관분야별로 규제전수조사를 실시하여, 발굴규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,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·의결
  - 동 작업시 실질적인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상의 각종 별표규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
- ☐ 기타 분야는 현행과 같이 소관부처별로 추진하되, 1/4분기중 명확한 지침과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시달

### < 하위규정·유사행정규제 중점정비대상분야 >

중 점 분 야	세 부 추 진 계 획	비 고
1. 해양수산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업반구성</li> <li>○ 항만·해양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li>○ 수산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/ul>	2001.6월중 2001.7월중 2001.8월중
2. 건축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업반 구성</li> <li>○ 건설산업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li>○ 주택·도시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/ul>	2001.2월중 2001.3월중 2001.4월중
3. 산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업반 구성</li> <li>○ 자원정책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li>○ 중소기업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/ul>	2001.3월중 2001.4~5월중 2001.6월중
4. 환경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업반 구성</li> <li>○ 수질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li>○ 대기·소음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li>○ 환경생태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/ul>	2001.3월중 2001.4월중 2001.5월중 2001.6월중
5. 문화체육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업반 구성</li> <li>○ 체육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li>○ 문화관광분야 하위·유사규제정비</li> </ul>	2001.3월중 2001.4~5월중 2001.6~7월중

### 3. 新設・強化規制審査의 強化

#### ☐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

- 신설·강화규제의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, 비용이 효과보다 큰 경우 원칙적으로 신설·강화를 불허
- 국민생활과 관련이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영향 분석 결과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
- 규제영향 분석기법을 개발·향상하고,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

#### ☐ 규제총량제의 엄격한 적용

- 규제신설시 신설규제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계획을 제출 받아 실질적인 규제총량을 일정하게 관리
- ※ 기존규제의 폐지가 어려운 경우 소관부처 산하단체의 유사행정 규제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이를 기존규제 폐지로 인정

#### ☐ 모든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(존속기한) 적용

- 모든 신설·강화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설정
- 존속기한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규제영향 분석서에 명확히 제시

#### ☐ 철회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심의결과의 집행력을 제고 (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)

#### 4. 國家競爭力 向上과 經濟活性化를 위한 規制改革 強化

##### 가. 企業活動의 自律性伸張을 위한 規制改革 推進體系 構築

- ☐ 대한상공회의소,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등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건의받아 개선방안 마련

※ 2001.1월중 접수예정인 제1차 건의과제에 대하여는 1/4분기중 개선안 마련

- ☐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의 분기별 간담회 등 정례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

- ☐ 한국건설경제협의회 등 분야별 이익단체로부터의 건의도 수시로 수렴,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반영

##### 나. 既存規制의 持續的인 整備

- ☐ 그동안의 기존규제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혁이 미흡한 분야를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정비 추진

- 2000년 이월과제 및 금년도에 신규발굴한 과제 등을 대상으로 25개의 특정과제를 선정

-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 방안 등 22건
- 소방관련 규제개혁방안 등 2000년도 이월과제 3건

※ 2000년도 이월과제 총7건중 3건은 2001년도 특정과제에 포함·추진하고 2건은 지식정보화과제와 연계하여 추진(국가자격 검정관련규제개혁,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방안 등 2건은 정책적 판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보류. 당초 선정된 2000년도 추진대상 63개 과제 중 56개 과제는 추진완료)

## □ 주요 정비대상과제

- 각종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: 4개 과제
    -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(재경부)
    -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제한제도 개선(정통부) 등
  -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: 5개 과제
    -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합리화 방안(재경부, 금감위)
    - 관광산업관련 규제의 합리화(문광부) 등
  - 민간의 자율성 확대·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: 8개 과제
    -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(재경부, 금감위)
    - 직업교육·훈련관련 규제개혁방안(노동부) 등
  - 규제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규제의 개선 : 4개 과제
    - 광고물관련 규제개혁방안(행자부)
    -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설치관련 규제개선(환경부) 등
  - 기타 관련 법령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의 개선 : 4개 과제
    - 환경관련 유사중복성 규제개선방안(환경부)
    - 해양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(해양부) 등
- ※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 및 국민제안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중점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연중 추가로 선정하여 개혁추진

□ 추진방안

- 소관부처가 제시하는 개혁안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,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혁안을 마련
-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혁안 마련

□ 추진일정

-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2월까지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하반기중 위원회 상정
- 비용역과제에 대해서는 1/4분기중 초안을 접수하고 상반기중 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

※ 2001년도 추진대상 특정과제 : 첨부 1

## 5. 規制改革 成果의 評價・弘報強化 및 支援 擴大

### 가. 規制改革 推進成果에 대한 綜合評價 實施

#### ☐ 추진방안

- 국민의 정부 4개년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, 향후 규제개혁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9개 전 부·처·청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실시
  -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시달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
- 평가결과 우수부처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하고, 재정상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강구

#### ☐ 주요 평가내용

- 부처내 규제개혁 추진기구 구성·운영의 합리성, 규제개혁 추진의지, 규제영향평가 실시수준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
-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, 규제수단의 품질 등 규제개혁안 결정의 합리성
- 입법화노력, 홍보 등 규제개혁안의 집행노력
- 국민체감도, 경제사회적 영향 등 규제개혁안의 성과와 파급효과 등



## 나. 規制改革 모니터링制度 運營

- ☐ 일선행정 현장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새로운 규제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규제개혁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
  - 유사행정규제개혁 작업단, 분야별 규제개혁 전문가그룹, 전문 언론사, 시민단체, 규제개혁세미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
  - 학자, 기업인, 전직 공무원 등 규제현실을 잘 아는 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, 각종 현안사항 발생시 자문그룹으로 활용

## 다. 規制改革關聯 세미나 등 研究・弘報 強化

- ☐ 규제개혁과정에 이해관계인과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, 연구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규제개혁관련 세미나를 개최
  - 출연연구기관, 분야별 전문언론사 경제단체 등과 공동개최

### <분기별 세미나 개최계획>

분기별	주요주제	주관기관
1/4분기	○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개혁방안	○ 산업연구원
2/4분기	○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	○ 해양수산개발원·해사신문사(공동)
3/4분기	○ 건축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	○ 국토연구원·건설신문사(공동)
4/4분기	○ 소방관련 규제개혁방안	○ 반부패특위·소방안전지(공동)

## 라. 地方自治團體의 規制改革 支援

### <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향 >

-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
- 자치단체 규제개혁 내실화 및 일선공무원의 규제개혁마인드 제고
-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대민 홍보 강화

### ☐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지침 시달

-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지침을 2001년 1월말까지 시달
-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지침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(2001년 2월)

### ☐ 규제개혁 이행실태 지도·점검 강화 및 평가

- 자체 규제정비 및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(행정자치부)
- 중앙부처 점검과 관련하여 지자체 집행사항에 대한 규제개혁 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실시

<참고1>

## 2001년도 추진대상 특정과제

구 분	일 정
<b>1. 각종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</b>	
①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(재경부)	2001.8
②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(공정위)	2001.2
③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점업제한제도 개선(정통부)	2001.9
<b>2.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</b>	
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합리화방안(재경부, 금감위)	2001.10
② 사회복지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(복지부)*	2001.11
③ 관광산업관련 규제합리화(문광부)	2001.8
④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합리화(노동부)	2001.9
⑤ 소음진동 측정관련 규제개선방안(환경부)*	2001.11
<b>3. 민간의 자율성 확대·강화를 위한 규제개선</b>	
①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(재경부, 금감위)	2001.5
② 직업교육·훈련관련 규제개혁방안(노동부)	2001.10
③ 기간통신사업자간 거래제도 개선(정통부)	2001.8
④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발전방안(공정위)	2001.6

구 분	일 정
⑤ 소규모 농지거래 제한 규제개선방안(농림부)	2001.5
⑥ 접도구역 규제개선방안(건교부)	2001.5
⑦ 고등교육기관 설립·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(교육부)	2001.5
⑧ 체육시설 설치·운영관련 규제개혁(문광부)	2001.8
⑨ 에너지 이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(산자부)	2001.3
4. 관련법령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의 개선	
① 해양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(해양부)	2001.5
② 환경관련 유사중복성 규제개선방안(환경부)	2001.4
③ 농업인·농용시설 및 가축등의 개념정비 및 범위확대 개선방안(농림부)	2001.10
5. 규제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규제의 개선	
① 오수처리 및 정화조 설치관련 규제개선(환경부)**	2001.10
② 광고물관련 규제개혁방안(행자부)*	2001.9
③ 소방관련 규제개혁방안(행자부)*,**	2001.11
④ 건축기준 합리화방안(건교부)	2001.10
6. 과도한 보고 및 신고부담의 경감을 위한 규제개혁	
① 각종 보고(신고)부담 경감방안(재경부, 금감위)*	2001.8

주 : “ \* ” 표시는 용역대상과제

“ \*\* ” 표시는 2000년도 이월과제

<참고2>

## 2001년도 지식정보화관련 추진대상과제

### 1.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

구 분	일 정
<b>1-1.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</b>	
①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(행자부)	2001.2
②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규제정비(행자부)	2001.2
③ 정보통신망이용 민원의 신분확인관련 규제개선(행자부)	2001.2
④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(건교부)	2001.10
<b>1-2.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</b>	
① 표준화 시스템의 재정비(산자부)	2001.10
② 단체표준의 활성화(산자부)	2001.8
③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(산자부)	2001.6
④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(특허청)	2001.6
⑤ 신기술개발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(특허청)	2001.10
⑥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(통계청)	2001.6
⑦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(특허청)	2001.10
⑧ 생명공학관련 법령 정비(복지부, 과기부)	2001.8

구 분	일 정
⑨ 외국인 투자제도 규제개혁(산자부)	2001.6
⑩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(재경부)	2001.3
⑪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(재경부, 금감위)	2001.1
<b>1-3. 선진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</b>	
①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(재경부, 금감위)	2001.6
②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 완화(재경부)	2001.6
③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(재경부)	2001.6
④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(재경부)	2001.10
⑤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(재경부, 금감위)	2001.6
⑥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(금감위)	2001.3
⑦ 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(재경부)	2001.3
<b>1-4.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</b>	
①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(복지부)	2001.6
②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(복지부)	2001.6
③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(행자부, 금감위)	2001.5

## 2.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

구 분	일 정
<b>2-1.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</b>	
① 각종 영업의 인·허가, 등록요건인 사무소, 상시고용인수,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(전 부처)	수 시
② 원격의료 제도 도입(복지부)	2001.6
③ 전자의무기록 제도의 도입(복지부)	2001.6
④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(복지부)	2001.6
⑤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(복지부)	2001.3
⑥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합리화(문광부)	2001.2
<b>2-2.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</b>	
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(공정위, 산자부, 법무부, 정통부)	2001.6
②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(재경부)	2001.6
③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(산자부)	2001.6
④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(재경부)	2001.3
<b>2-3.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</b>	
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(정통부)	2001.1
② 공간정보의 유통·활용범위 확대(건교부)	2001.6
③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(건교부, 행자부)	2001.3
④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(건교부)	2001.6
⑤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 개선(건교부)	2001.6
⑥ ITS시설의 설치 근거규정 보완(건교부)	2001.6
⑦ 공공부문 수집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(건교부)	2001.6
⑧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(건교부)	2001.6

### 3.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

구 분	일 정
<b>3-1.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</b>	
① Cyber교육체제의 구축·운영(교육부)	2001.6
②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경쟁제고 방안(교육부)	2001.3
③ 교과서 발행·공급 규제개혁(교육부)	2001.3
④ 학원설립·운영제도 개선(교육부)	2001.6
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(교육부)	2001.3
⑥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(교육부)	2001.3
⑦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(교육부)	2001.6
<b>3-2. 새로운 직업장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</b>	
① 직업교육 평가제도 개선(노동부)	2001.6
②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(노동부)	2001.6
③ 휴일·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(노동부)	2001.3
④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규제개혁(노동부)	2001.6
⑤ 여성근로자 보호제도 개혁(노동부)	2001.3
⑥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 규제개혁(노동부)	2001.6
⑦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제도 개혁(노동부)	2001.6
⑧ 근로자공급사업관련 규제개혁(노동부)	2001.6



#### 4.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한 제도정비

구 분	일 정
① 우수쇼핑몰에 대한 포상·인증제도 개선(산자부,정통부)	2001.1
②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(공정위)	2001.6
③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정비(정통부)	2001.1
④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(정통부)	2001.6
⑤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자율 표시제 추진(정통부,청보위)	2001.6
⑥ D/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(정통부)	2001.2